

동강 난 선체 어디에…수색작업 난항

해군 초계함 침몰 전남출신 4명 등 46명 실종

58명 구조…오늘 美군함·독도함 사고해역 투입

관련기사 2·3·4·5·6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지난 26일 오후 폭발과 함께 선체 뒤쪽에 구멍이 뚫려 침몰했다. 함정에 탑승한 승조원 104명 중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고 3일째인 28일까지도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 실종자 수색 마지막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의혹과 함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개요= 지난 26일 오후 9시45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1천200t급)이 선체 뒤쪽 스크루 부분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커다란 구멍이 뚫렸으며, 이 충격으로 선체가 공중으로 20~30cm 가량 들리면서 내려앉아 침몰했다.

사고가 나자 상당수 승조원은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전체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46명은 28일 현재 실종된 상태다. 실종자 중 문규석(37·구례)·강준(36·고흥)·정종율(33·곡성)·증사, 이상민(22·순천)·병장 등 4명이 전남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원인 규명= 사고 사흘째인 28일 오후까지도 폭발과 침몰의 원인 및 과정은 미궁에 빠져있다. 현재로서는 윌터 샤프한미연합사령관이 이날 “북한군에 의한

어떠한 특이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합참 등에서도 ‘내부 폭발’로 의심이 모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관계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해군은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지역에 해난구조대(SSU) 잠수요원과 장비를 투입해 선체에 발생한 파공(구멍)의 상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29일엔 미군함도 조사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조현황= 현재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는 SSU요원과 의료진 등 100여 명을 비롯 해군 창설 이후 가장 많은 해난 구조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해군은 특히 28일 오후에 구난함인 광양함(3천t급)과 함께, 분리된 선체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소해함(기뢰제거함) 두 척

을 사고 해역에 긴급 투입했으며, 29일에는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을 사고해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해군은 이날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SSU를 투입했지만 오후 늦게까지도 두 동강 난 천안함의 핫수(艦首)와 핫미(艦尾)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 해역의 기상은 15노트, 시계 5~7마일, 수온 3.7도로 비교적 양호하나 해역 자체가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있어 수중 물살이 거세고, 해역 바다의 밟으면 홍탕물을 일으키는 것과 모래층이어서 시계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 특히 실종자인 심영빈 하사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심 하사의 이름으로 된 전화가 걸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통신사에 조회한 결과 그런 발



신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정부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김태영 국방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진상규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도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진상규명과 수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참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택 해군제2함대사령부=김형호기자 khh @kwangju.co.kr·연합뉴스



수색 나선 SSU대원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지 사흘째인 28일 오후 백령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해군 SSU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기초단체장 공천 곳곳 잡음

전남 군수후보 3명 등 15명 배제…기준 애매 일부 반발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심사 및 압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심사와 애매한 배제 기준 등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공심위는 지난 25일 광주 남구 청장 경선 후보자를 최영호, 정재훈, 김영길씨 등 3명으로 압축했으나 탈락한 김화진 예비 후보에 대한 장애 기산점을 적용하지 않아 다시 재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남구청장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결정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구청장 후보 경선에 도입되는 시민 공천배심원제는 후보자를 2~3명을 선정토록 하고 있어 현재 4명의 후보 가운데

1~2명을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구청장 예비 후보 재심과 관련, 특정 후보 낙점설이 떠도는 등 부실심사에 따른 후유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광주 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김선옥 예비후보가 이날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에 전주언 서구청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후보자 자격 재심을 신청하고 경선 일정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심사에서도 전과 경력에 대한 애매한 배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합평군수 후보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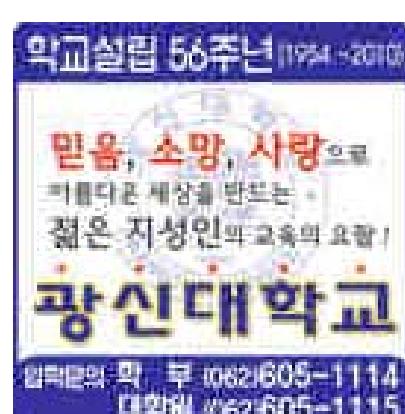
사에서 도박 전과가 있는 후보는 20년 전의 일이라며 불문에 부쳤지만, 조세포탈 전과 후보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니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은 단수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배제 기준을 놓고 정치적 배경을 거론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남도당은 사기 등 수차례의 전과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은 경우, 예비 후보로 등록시켜 배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당은 지금까지 총 35명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군수 후보, 12명이 혐의 지방의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연을 담은 과학

그린 알로에

자연을 담은 과학

자